

액상담배는 덜 해롭다?... '절반 담뱃세' 역차별 논란

액상형 '줄·릴 베이퍼' 출시 논란
유해성 높을수록 세금 높게 책정
일반vs전자 유해성 연구 '진행중'
궐련형 출시때도 논란... 결국 인상



미국 액상전자담배 브랜드 '줄 랩스(JUUL Labs)'

/손진영 기자 son@

액상형 전자담배 '줄'과 '릴 베이퍼'가 출시되면서 담뱃세 과세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줄의 판매 단위인 '팟'의 가격이 일반 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가격이 같지만, 줄에 붙는 세금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다른 제품들과 같은 수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핵심 유해물질인 니코틴의 함유량 등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과 세를 적용하는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정부는 판매량이나 유해성 등을 살펴본 뒤 과세 체계 수정을 검토하겠

다고 밝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줄의 팟 1개 가격은 4500원으로 일반 담배 1갑 가격과 동일하다. 그러나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 담배의 50% 수준이다. 이는 현행법상 일반 담배는 1갑(20개비)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줄 등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줄과 릴 베이퍼는 액상형 니코틴 카

트리지를 기기 본체에 끼워 피운다. 이 카트리지는 현행법상 니코틴 1ml/당 일정 금액을 과세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분류된다. 예컨대 니코틴 함량이 0.7ml인 줄 카트리지는 담배소비세 440원, 건강증진부담금 368원,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259원 등 1769원(부가 가치세 포함) 세금이 붙는다. 일반담배 세금은 3323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3004원이다. 줄 세금을 일반 담배 세금

과 비교하면 일반담배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한편 담배 세금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출시했을 때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줄·릴 베이퍼와 마찬가지로 일반담배의 50% 수준으로 세금을 매겼다 문제가 되자 관련법을 개정해 90%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궐련형 전자담배나 액상형 전자담배가 출시될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유해성 때문이다. 유해성이 높을수록 세금을 높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가장 건강에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일반담배에 가장 높은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일반담배와 전자담배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가 '현재 진행형'이다. 일반담배가 전자담배보다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전자담배가 일반담배 못지않게 유해 물질을 다량 함유한다는 연구 결과

도 존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 유해성에 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줄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만 세금을 낮게 부과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6일 전자담배 유행성에 관한 논란이 일어나자 신종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담뱃세 관련 실무자들이 회의를 갖고 세금 체계 개편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줄의 세금은 현행 액상형 전자담배로 적용받는다. 기존의 액상형 충전 담배와 같다고 봐야 하는지 다르게 봐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향후 세금 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주채무계열 30곳 선정... 동원·현대상선 신규편입

〈부채가 많은 기업을 관리하는 제도〉

금감원, 올 3곳 제외 2곳 편입
총 신용공여액 238조, 1.2% ↓
'실효성저하 우려' 내년 제도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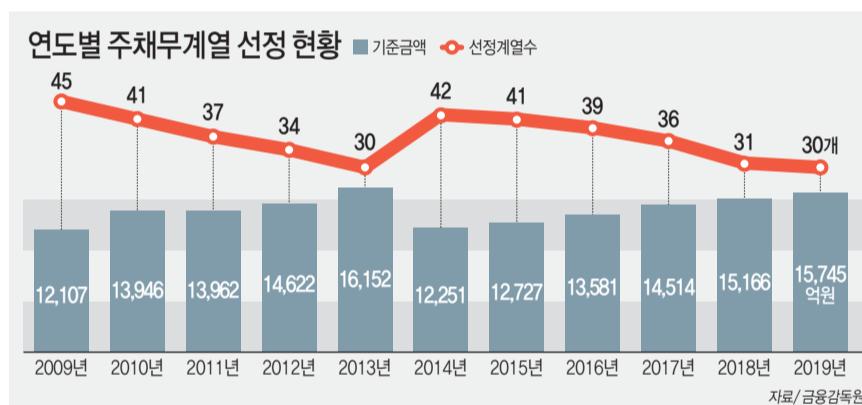
올해 재무구조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31개 기업집단이 선정됐다. 지난해 31개에서 한국타이어, 장금 상선, 한진중공업 등 3개 계열이 제외됐으며 동원, 현대상선 등 2개 계열이 신규 편입됐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바뀐 경영환경을 감안해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을 포함한 총차입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기준도 기존 별도재무제표에서 연결 재무제표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은행·보험·여전·종금) 신용공여(차입금)액이 1조5745억원 이상인 30개 계열기업군을 2019년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의 신용공여액은 23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금감원은 매년 전년 말 신용공여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의 0.075% 이상인 기업집단을 주채무계열로 지정한다.

주채권은행은 선정된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해 결과가 미흡한 경



우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한다.

올해는 3개 계열이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고, 2개 계열이 새로 편입됐다.

한국타이어와 장금상선 계열은 실적개선과 자구계획 이행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했고, 한진중공업 계열은 채권단 출자전환에 따른 계열분리로 신용공여액이 줄면서 제외됐다.

새로 편입된 곳은 동원과 현대상선이다.

상위 5대 주채무계열은 현대자동차, 삼성, SK, 롯데, LG 순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개사(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순)는 같지만 순위만 일부 변동이 있었다.

3개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산

업(9개), 우리(9개), 하나(5개), 신한(4개), 국민(3개) 등 5개다.

내년부터는 주채무계열 제도가 일부 개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자금조달 변화와 해외진출 확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등 대기업그룹의 경영환경이 크게 변했지만 주채무계열 제도는 과거 10여년간 큰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됐다"며 "주채무계열 선정→재무구조 평가→사후관리에 걸친 제도 전반을 올해 하반기 중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계열의 차입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신용위험을 포함하기 위해 자금수요자(계열) 관점에서 총차입금 기준을 도입한다. 현행 '계열의 금융권 신

용공여가 전체 금융권 신용공여의 0.075% 이상'이었던 기준을 '계열의 총 차입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면서, 계열의 은행권 신용공여가 전체 은행 기업신용공여의 0.075% 이상'으로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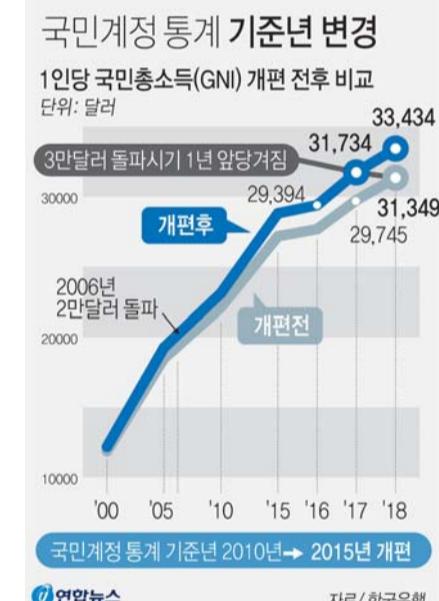
기준에는 대출, 지급보증 등 금융회사 신용공여로 한정돼 그간 크게 증가한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의 다양한 신용위험을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A계열의 금융권 차입이 1조1000억원, 시장성 차입이 1조2000억원이라고 가정하자. 지금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주채무계열로 선정된다.

또 재무구조평가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실시한다. 해외부문 재무구조 및 실적을 보다 투명하고 정교하게 반영하고, 부채비율 300% 미만 구간의 기준점수도 세분화한다.

채권은행의 사후관리 역시 사업계획과 연계한 체질 개선 유도와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실효성을 높인다.

금감원은 개선 방안에 따른 영향분석 결과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은행업감독규정·세칙',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1인당 GNI 3만 달러 돌파시기 1년 앞당겨
한은, 2018→2017년 변경

한국은행이 국민계정통계의 기준년을 기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달러 돌파 시기가 2018년에서 2017년으로 조정됐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이전보다 연평균 0.2%포인트 상향됐다.

한국은행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2000~2018년)'를 발표했다.

한은은 경제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통계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년을 1958년(1955년 기준년)부터 5년마다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이번 12차 개편은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인 간(P2P) 디지털, 공유경제 규모 등을 추산해 반영했다.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결과 1인당 GNI는 2017년 2만9745달러에서 3만 1734달러로 약 1990달러 늘어났다. 이 영향으로 1인당 GNI가 3만달러를 넘은 시기가 2018년에서 2017년으로 조정됐다.

/김희주 기자 hj89@

소비자물가 5개월째 0%대 성장

통계청, 2015년 이후 최장기록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5개월째 1%를 밟았다

정부는 물가 불안 요인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면서 생활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05

(2015년=100)로 1년 전보다 0.7% 상승했다.

지난 1월 0.8%, 2월 0.5%, 3월 0.4%, 4월 0.6%에 이어 5개월째 0%대다. 이런 연속 0%대 기록은 2015년 2월~11월(10개월) 이후 최장이다.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는 0.2% 상승했다.

품목 성질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0.09%포인트 끌어 올렸다. 특히 축산물은 2.6% 올랐다.

하지만 채소류와 수산물은 각각 9.9%, 1.3% 하락해 전체 물가를 0.15%포인트, 0.02%포인트 끌어내렸다.

찹쌀(21.5%), 현미(20.3%)는 크게 상승했지만, 무(-48.5%), 배추(-33.3%), 감자(-30.5%) 등은 크게 하락했다.

공업제품은 0.3% 상승해 전체 물가를 0.09%포인트 올렸다. 공업제품은 1~4월 연속으로 하락했으나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